

제418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9월 26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세수 재추계 등에 대한 현안 보고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
o 소위원장(정태호·박수영·정일영·구자근) 인사	2
2.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3.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3
4.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4
5. 세수 재추계 등에 대한 현안 보고	7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송언석 의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구성 및 올해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세수 재추계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AIIB 연차총회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위원장이 양 간사님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송언석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을 분담하여 심사하기 위한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간략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 및 재정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1인으로, 세법 등 조세 분야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는 13인으로,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을 심사하기 위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각각 5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경제재정소위원장으로는 정태호 위원님, 조세소위원장으로는 박수영 위원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는 정일영 위원님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는 구자근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소위 위원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소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 소위원장(정태호·박수영·정일영·구자근) 인사

(10시09분)

○위원장 송언석 그러면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민생을 해결하고 또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조세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수영입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우리 조세제도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많은 조세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위원님 함께 합의해서, 협조를 잘 받아서 좋은 조세제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정일영입니다.

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편성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예결위 활동하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서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매년 반복되고 최근에 특히 문제가 있는 세수 문제, 세수결손, 세수 추계 오차, 우리 소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된 구자근 위원입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회의 민의를 수렴하는 위원회입니다. 맡은 바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고맙습니다.

2.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송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 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이고 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총 42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의 경우 중앙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고 10월 23일과 24일 진행되는 지방감사는 반을 나눠서 감사1반은 영남 권역을, 감사2반은 호남·충청 권역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감사반의 구성은 추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기관별 감사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계획서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송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 소관 업무 전반을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총 8140건의 서류제출요구에 따라 각 기관으로 하여금 감사일 7일 전까지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 이후에 추가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12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기관들은 오늘 의결된 보고 및 서류제출 등을 성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14분)

○위원장 송언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단말기 자료와 같이 기관증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실국장급 이상,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각 기관장 및 국장급 이상, 소관기관은 임원급 이상 및 지역본부장들에 대하여 해당 기관 감사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결과, 일반증인 4인과 참고인 1인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추가협의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영대 위원 증인 신청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송언석 신 위원 먼저 하십시오.

○신영대 위원 저희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지금 조세회피지역에 법인이 설립된 대기업들 관련해 가지고 증인 신청했는데요.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기업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설립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실제 국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설립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를 따져 보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세수결손이 심한데 국내에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해외 법인을 설립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기업을 압박하는 목적이 아니니만큼.

특히 파나마랄지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이런 데 법인 설치한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일부 기업들의 해명들 들어 보면 같이 투자하는 기업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설치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소명된다고 한다면 기업이 해외 투자를 위해서 같이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투자자 요구에 의해서 한다

고 한다면 그것은 소명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기업은 너무 많아요, 해외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기업 숫자가.

그래서 이것은 여야 간사님들이 협의하시면서 중인 협상할 때, 이번에는 의결하는 거지만 종감도 있고 하니까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님이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증인 신청을 여러 위원들께서 하시고 그리고 그중의 몇 가지 흐름들에 대해서 함께 양당 간사님들께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인들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좀 자체하자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대통령도 밸류업을 이야기하고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가 되는 그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약 5000억가량 손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에 관련된 사람들 또는 LG 화학 물적분할 그리고 SK 관련된 그룹들 또는 두산밥캣 등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눈물 나는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정책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회에서 많이 불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인은 무조건 안 된다, 재벌 총수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하면 실제 개미투자자 눈물 씻어 주는 게 아니라 더 피눈물 나게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호반건설 관련해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당사자가 2003년 중학생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30대 중반 됐는데 약 2조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법하게 부를 축적하는 데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판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과징금도 있었고 국세청이 2021년도, 2022년도인가 세무조사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많은 의혹과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적으로 해명과 그리고 제도개선의 지점이 뭔지, 실제 우리가 세금을 제대로 부과 못 하고 있는,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을 토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꼭 양당 간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지금부터 1분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짚어졌어요?

하여튼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을 오늘로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국감하면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국회의원들이 증인 잘 좀 할 수 있게 위원장님, 간사님 매번 회의할 때만 좀……

결정을 해 주십시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특히 다국적기업 디지털세 관련해서,

조세회피 관련해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메르세데스, 나이키코리아,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만 돼 있는데 다른 데도 좀 넣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타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은 문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타제도를 기재부에서 잘하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인도 좀 채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예비비 관련 중인도 채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상임위가 계속 열릴 테니까 위원장님, 간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상 위원 2분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예,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저도 국정감사 중인 채택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SK 최태원 회장을 중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오늘은 아마 채택이 못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누구에게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 또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 의혹에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민주공화국 시민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특히 주권자로서 국민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 알권리입니다. 이 알권리는 국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나는 정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성이나 SK 등 대기업이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혹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이나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 과정에 부당함이나 불공정, 불평등한 면은 없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확인할 책무가 국회에는 있습니다.

특히 삼성과 SK는 반도체 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으로 국가의 미래를 끌고 가야 되는 중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용·최태원 회장으로부터 기업 운영상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국정감사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행정부가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고 범인세 감세 등의 정책이 절실한지 기업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금융통화위원 추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꼭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양 간사님과 위원장께서 국민의 입장에서 중인 채택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마지막으로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수원시병의 김영진입니다.

저는 공기업이었다가 전환된, 한마디로 민간기업으로 전환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특히 KT&G 같은 경우 사실은 독점적인 활동에서 민영화되면서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KT&G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연초제조창들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수백억대의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바를 전혀 지키지 않는 이런 공기업 후 민영화된 기업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서 KT&G와, 두 번째는 같은 형태로 같은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신세계의 행태가,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괴롭히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약속에 대한 문제고 국민의 기업이었던 KT&G가 민영화되면서 국민과 한 약속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을 봄에도 불구하고 개발하면서 교통영향 대책으로 약속했던 바들에 관한 이행들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소환해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데 실제로 관련한 기업이나 정책 관련한 부분들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기재위에서 한 번 정도는 공공기업의 민영화 이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감 때 간사님께서 좀 깊이 상의하셔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우리 기재위의 국정감사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는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이슈입니다마는 기업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감을 끌고 나가는 것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낳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있던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책이나 제도적인 허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마땅히 정부가 집행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정부 부처를 불러서 우리가 열심히 따져야 될 부분들은 따지고 혼내야 될 부분은 혼내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대안도 제시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감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채택 관련해 가지고 80여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신청하셨는데 두 분 간사님이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도 굉장히 협의를 진지하게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많은 의견 주셨지만 두 분 간사님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대로, 그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일단 의결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서로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나와 있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결하고자 하는데 추가적으로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5. 세수 재추계 등에 대한 현안 보고

(10시 26분)

○**위원장 송언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세수 재추계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복**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경제 동향과 24년 세수 재추계 등 기획재정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는 2%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저소득층, 건설 등 부문별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수 회복 가속화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민간투자, 벤처투자 등 부문별 맞춤형 투자 활성화 대책을 연내 마련하고 지역관광 확대 및 저소득층의 소비여력 보강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설비투자 인센티브 보강, 소비 활성화 입법 등 내수 활성화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금융부담 완화와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원 등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내외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21만 호의 주택 등을 추가로 공급하여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계부채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도 필요시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와 세수 추계 개선 방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까지의 세수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3조 원 대비 29.6조 원 부족한 337.7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의 장관으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기재위 위원님들께 최근 세수 추계 오차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세수 추계 개선 방안과 재정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예측 불가능하게 전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수 오차가 확대되었고 우리나라로도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반도체 등 주요 기업 실적의 변동 폭이 확대되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범인세와 자산시장 세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변동하였습니다.

21년과 22년에는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며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법인세와 양도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1년, 22년 당시 세수 오차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세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는 전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로 기업 영업이익이 예상과 달리 크게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과열되었던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어려웠던 경제 여건하에서 기업 실적이 당초 정부와 시장의 전망을 크게 하회하여 법인세가 대폭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23년 이후로도 최근 세수 오차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것임을 고려해서 경기 예측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세수 추계에 민간의 시장 전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세수 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를 모든 과정에서 국회, 외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경제지표를 전망하고 추계 모형을 설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세입예산안 편성 단계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KDI와 함께 정부가 가진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협력하고자 합니다. 각 전문기관이 축적하고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함과 동시에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여 최선의 세수 추계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세수를 추계함으로써 세수 추계와 재정 운용에 대하여 기재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AI·빅데이터 기반 세수 추계 모형을 개발하고 미시 과세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세수 추계 개선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대응코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우려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대응 방안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현안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입니다.

장문선 재정정책국장입니다.

박준호 공공정책국장입니다.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최재영 관세정책관입니다.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진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최근 경제 동향과 2024년 세수 재추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최근 경제 동향입니다.

세계경제는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추세이며 미 연준의 경우 이번 달 2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였으며 향후 금리 인하 폭 전망을 당초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물가는 2%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으로 소상공인, 저소득층, 건설 등 부문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먼저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한 과제입니다.

투자는 연내에 민간 투자, 벤처 투자 등 부문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설비 투자 회복과 건설 투자 보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 익스프레스 운영 등 투자를 저해하는 민간 부문 애로 해소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소비 진작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축제 등을 계기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도 보강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재기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임대료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확대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디지털화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쪽과 5쪽입니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입니다.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주택 공급 우려에 대응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21만 호 주택 및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을 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만일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의 시장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미국 대선 등 글로벌 정치·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4년 세수 재추계입니다.

금년 국세수입은 337.7조 원으로 예산 대비 약 29.6조 원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이는

작년 기업 실적 부진 등 경기 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 자산시장 부진에 주로 기인하며 유류세율 인하, 긴급 할당관세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그간 세수 오차 개선을 위해 세수추계위원회 설치, 세수 추계 모형 재설계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세수 추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7쪽입니다.

이에 정부는 거시지표 전망, 모형 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세수 추계의 전 과정에서 국회와 세수 추계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추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매년 9월 당해 연도 수정 전망 실시를 정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추계 모형을 개발하는 등 세수 추계 모형 개선을 추진하고 세수 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 확충 및 전문인력 채용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금년 세수 추계에 따른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정부 내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안 보고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오늘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서 간사님들 간 협의에 따라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신가요, 아니면……

○정일영 위원 질의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신, 정일영 위원님 손 드신 게 보였습니다.

일단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에 최근 경제 동향이 매우 낙관적으로 돼 있는데 그건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국감 때 구체적으로 왜 경제가 나쁜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수 재추계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우선 9월 4일 날 지난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 때 제가 장관님께 올해 세수결손을 얼마로 예측하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위원님, 제가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지 제가 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자격으로 이걸 보고하십니까? 세수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하는 건데, 그러면 그만두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은 또 이걸 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감이라든지 예결위 때 제가 장관께 더 질의를 하고 장관님의 해명, 납득할 수 있는 사과

분명히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추계가 너무나 중요한데, 올해도 30조 정도 결손 또 작년에도 이보다 한 2배 정도 더 컸고. 그런데 이게 결국 제가 볼 때는 원인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대통령이나 총리, 부총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경제에 문제없다. 경제 좋다’, 항상 좋다는 얘기만 하셨어요. 낙관론이에요, 낙관론. 제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고.

그런데 오늘 보고서와 부속 첨부자료에 보면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문제에 봉착한 거고 말하자면 민생경제는 거의 파탄 상태로 저는 보는데 이런 경제에 대한 적절한 인식, 대처 이게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재부의 무책임성인데…… 아니, 기재부가 최고의 엘리트 부처라고 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장차관, 심지어 요새 문제가 가장 큰 보건복지부장관도 아마 기재부에서 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기관에 엘리트 공무원, 직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장관들 막 가고 그랬는데 이런 똑똑한 기재부가 세수는 왜 이렇게 오차를 많이 내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까지 회귀모형 추계 방식을 썼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22년에는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을 쓰고, 그것 둘 다 안 되니까 그 2개를 섞어서 쓰고. 맞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안 좋아지는데 도대체가 그 똑똑한 기재부가, 엘리트 부처라는 기재부가 왜 이러는지, 정말 능력이 없는 건지 무책임한 건지, 아니면 어떤 고의성이 있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세수 추계가 중요해요. 그래야 경제정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재정건전성, 이게 실적이 전망치보다 못 미치니까 재정건전성도 악화되고 적재적소에 예산도 못 쓰고. 특히 세수 부족하니까 추경이 필요한데 국회하고 협의도 없이 외국환평형기금,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부금 이런 것 미집행, 편법, 돌려막기 이런 식으로 계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수 추계 오차가 크고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요구를 합니다, 정부에, 부총리님께.

첫째는 추경 편성을 하십시오, 정공법으로. 돌려막기식으로 하지 말고 추경을 편성하십시오.

둘째는 재정청문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와 같이 재정청문회를 개최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 보자고요.

셋째는 계속되는 세수 추계 오차, 매년 개선한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부총리 사퇴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책임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세요. 오늘 인사말씀에도 책임감 표명을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민생경제, 경제 다 어렵습니다. 거기에 경제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세수 추계가 맞지 않습니다. 부총리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세수 추계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관이 답변을 하니까 기재부 직원들이 무책임성을 보이는 겁니다.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사퇴 등 책임 있는 자세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수 추계 오차, 경제 악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를 표

명해야 됩니다.

이것을 요구드리고, 우선은 이렇게 모형이라든지 등등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개선한다고 기재부에서 쭉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이걸 어떻게 매듭지어서 자신 있게 세수 추계를 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수 예측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변했던 건,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때 말씀하셨던 건 ‘재추계 전에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공식적으로 재추계 전이기 때문에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그건 아니거든요. 국감 때 제가 속기록 그대로 보여 드릴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세수 추계 부분에 대한 오차가 네 번, 4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모형 개발하는 단계부터…… 그러니까 올해에, 내년 추계하려는 모형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정하거든요.

○**위원장 송언석** 요약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때부터 예정처하고 관련 기관들 모여 가지고 모형 개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건 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임광현 위원님 손 들었었어요?

○**임광현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순서대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직 시작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포함해서 5분이니까 시간을 좀 잘…… 왜냐하면 지금 다음 일정들이, 본회의도 있고 해서.

○**임광현 위원** 부총리님, 금년 5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전망 관련해서 부총리님이 대규모 세수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재추계 결과 30조 원 결손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대규모 결손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그 앞부분에 ‘작년과 같은’이라는 말을 붙였을 겁니다. 작년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광현 위원** 어쨌든 30조 원이 대규모 결손입니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임광현 위원** 대규모 맞지요.

2021년도에 61조 원의 초과세수 오차 원인을 당시 기재부는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서 경제지표 전망치의 플러스 오차가 확대됐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조 원 결손의 오차 원인은 2023년, 지난해의 경기 둔화 여파가 마이너스로 예상을 더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회복세도 예측 못 하고 경기 둔화 추세도 예측이 안 되면 기재부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시, 하여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저희가 큰 틀에서 완벽하게, 관련 기관들하고 해서 기재부가 지금까지 했던 세수 추계하는 방법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저는 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막연한 낙관론, 여기가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추계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정부 재추계를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8월부터 5개월 동안 30.2조 원, 그러니까 법인세 정부 연간 목표치의 48%를 5개월 동안 걷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관건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될 겁니다.

지금 9월인데 올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가집계가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나왔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이 재추계에는 그 가집계가 들어간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들어간 겁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원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기업의 영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지난해에 법인세 중간예납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제가는 알기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 악화 때문에 이번 중간예납 때 결손이나 세액공제가 있어서 녹록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쪽 분야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업종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것 감안해서 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정부가 그동안에 늘 얘기했던 것은, 세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상반기에 물어보면 상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낮지만 하반기에는 낙관적일 거다. 그런데 결국은 또 30조 원이라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나왔고요.

지금 내년도 세수 추계 관련해서는 금저차고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금년에는 좀 낮지만 내년 경기는 좋아질 거다, 차년도에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또 하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 전망도 다시 한번 꼼꼼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 세수 전망은 올해 실적을 반영한 겁니다. 올해 기업들 영업 실적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도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 세수 전망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KDI하고 조세연구원하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토론회까지 해 가지고 같이 숫자를 맞춰 봤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저희 걸 잘 짚어 봐라 하는 건 지금 말씀대로 똑같이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 왔다 그리고 또 내년 세수 전망은 올해 기업 실적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광현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도까지 세수결손이 계속 이어지면 한덕수 총리가 정부가 물려받을 때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수결손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수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세법 개정안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대규모 감세안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기형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종욱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안도결 위원님 뒤늦게 손 드셨어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기형 위원** 앞서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수결손이 작년에 56.4조, 올해에 약 30조 정도 났으면 이게 대규모 세수결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이 다 웃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있으면, 보도자료 어제 해서 오늘 엠바고 풀렸는데 알아서 잘 풀겠다,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런 수준의 설명 하는 태도가 너무 염치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님 인사말에서 그래도 책임감 느낀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안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과와 유감, 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수결손은 아무리 봐도?

○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책임감을 느낍니다.

○ **오기형 위원** 그리고 재추계에 대해서, 7페이지 보니까 당해 연도 세수 전망을 정례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수 재추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해 연도 세수 재추계가 있고요. 하나는 차기 연도 예산안 세수 재추계가 있습니다, 세입 재추계.

매년 9월마다 재추계하겠다는데 이건 결국 가결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실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안 통과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봄이나 한 3, 4월쯤 해서 이게 문제가 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국회랑 추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도 하고? 그래서 국채 발행할 건지 지출 조정할 건지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국회랑 함께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이 속에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당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최상목 이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당시에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서 세수결손이 약 6조가량 감소할 거라고 했고, 그래서

세입경정 예산안이 나오는 것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직접 최상목 장관님이 그 당시에 설명하신 겁니다. 인터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6조만 문제가 돼도 이렇게 추경예산을 했는데 지금 30조가 되는데, 그전에 다 알고 있으셨는데 지금까지 추경을 하지 않은 것, 이 방식이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 이전부터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관료주의처럼 비판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어쩔 거냐’라고 국회에 다가오는 건 정말 염치없는 일이다 말씀드리고요. 이것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매년 9월 달에 정례화하겠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 이지요.

두 번째, 차기 예산안에 대해서…… 만약에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 가지고 9월 초에 예산이 왔다면, 그 예산안 수치가 적절하다면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11월 달에 심의하고 표결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게 이후에 다른 변동치가 있어 가지고, 경제 상황이 변해서 재추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재추계한 내용을 11월 달에 보고를 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국회에서 의결할 때 차기 연도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때 그 논쟁을 했었고 그게 2022년도의 비판이었잖아요. 그렇게 대안이 나와서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23년도, 22년도 안 했지 않느냐, 24년도 올해라도 할 거냐’ 그것 물어봤는데 여전히 답변이 없으니까 이따 답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세수 재추계 모형에 대해서 국회예정처랑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실제 모델 자체도 공개하겠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오기형 위원** 이건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선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신뢰 있게 풀어 가야 된다 보고요.

올해 세수결손이 큰데 정일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세수결손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지출사업 정리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또 그거지 않습니까? 30조 얼마 큰돈 아닌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켜봐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건 너무 오만하고 이게 국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국회와 소통하려는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도대체 30조가 결손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은 또 사회적 협력을 해야 하고 사회적 갈등을 풀어야 하는지 사전에 그걸 갖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안을 갖고 와서 이야기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건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지적하면서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임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계속 대통령이나 총리나 달나라에서 사시는지 왜, 우리 국민들이 민생으로 느끼는 건 다르다 그런 지적을 우리는 꾸준히 해 왔습니다. 지금도 무역수지 관련해서 올해 8월 말 기준을 보니까 흑자가 302억 달러인데 반도체 무역수지 적자가 432억 달러예요. 반도체 빼고 나면 마이너스인 거지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되고 내수는 안 된다 그러면 수출도, 이제 한쪽이 취약하다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방금 지적했듯이 뭔가 우려가 돼서……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경

제성장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번 여기에서 입장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의 세입·세수 추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경기 상황 등 세입 여건들을, 그러니까 만약에 위기 상황이라든지 8월 예산편성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게 나온다면 재추계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수 전체의 추계, 그러니까 세수 부족한 것에 대한 추계 규모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걸 대응하는 방법과 관련돼서는, 작년에는 저희가 얼마 정도는 불용을 하고 얼마 정도는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교부세, 교부금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국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지방정부하고 자자체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전체 규모가 있으니까, 세수 부족한 것에 대한 추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재정은 어느 정도로 해야 구김살을 최소화하면서, 지방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나오면 그 규모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민생에 구김살이 없는 부분에서 통상적인 불용이 얼마나 나오냐 하는 두 가지 규모가 나오면 결국 나머지 부분의 가용 재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고 자자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해야 되고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경제 전망은 현재는 저희가 2.2%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세수 추계는 올해 특히 법인세와 관련돼서 기업들 실적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업들 실적은 올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세수 추계와 관련된 부분들의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부총리님, 작년에 56조 원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서 올해도 30조 원 정도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정부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또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는 문제기는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세수 오차가 더 큰 점도 사실입니다. 특히 2021년 초과세수 61조 원 발생 이후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개선 노력과 다짐을 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어서 정부는 이 상황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하면서 새로운 추계 모형도 개발하시고 추계 과정에서 보다 열린 자세로 참여자나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대폭 확대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총리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재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죽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답변하십시오.

다음으로 세수결손 30조 원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추경 편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결산 심의에서는 여러 차례 저희들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세수결손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추경 편성 사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야 겨우 세수 재추계가 9월 이후에 가능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사실상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수 보전 대책은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집행 과정에서 대응하는 행정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도 중에도 세입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지출을 조정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연도 말에도 12월 30일·31일, 그러니까 세입 마감하는 최종 2영업일에 들어오는 세수가 적게는 4조에서 8조입니다. 4조가 들어올 수도 있고 8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연도 말에는 수억 원도 굉장히 큰돈인데 수조 원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든 연도 중의 대책을 그리고 연도 말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 정신도 그렇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정신이고 국가재정법 43조 예산집행 보류권, 13조 회계·기금 여유재원 통합활용권 그리고 70조 20% 이내의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등이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행정부에서 책임지고 자체 대응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가져오지 않느냐고 질책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규모 문제가 있습니다. 30조가 크지는 않은 숫자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모든 결국회가 결정하려고 하는 국회 만능주의도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부가 국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국가 운영,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부의 자율과 재량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수 보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30조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는데 30조가 크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맥시멈 10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고, 물론 국회에서 일반회계 국채 이자 지급유예라든지 교부세·교부금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예산상 국민경제의 생활을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경제에 미치는, 민생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교부세·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만 어쨌든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회의 질타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가감 없이 세수 추계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고 상의하는 모습은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 간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면 추진 경과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손 든 순서에 따라서,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하시고 차규근 위원님 하시고 박성훈 위원님 하시고……

늦게 손 들었지요? 처음에 안 들었잖아.

○**김영환 위원** 처음에 들었어요.

○**김영진 위원**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김영진 위원님이 처음에 들었으니까, 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 장관님, 어쨌든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수 오차율에 대해서, 점검한 이후에 역대 최대 오차율이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21년이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27.8%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마이너스 세수로는 가장 큰 결손이 난 거였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마이너스로는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마이너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시 반에 세수 관련돼서 보도자료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거하고 작년에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를 같이 비교해 봤거든요. 원인이 똑같습니다. 이런 세수 오차가 발생한 원인이 똑같아요.

제가 몇 개 짚어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 올해는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 그리고 작년에는 ‘기업 영업이익 급감’, 올해는 ‘기업 영업이익 하락’. 이런 표현들만 다르게 했지 원인 진단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나오는 게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어디를 얘기했냐 하면 국회예정처 얘기도 하고 KDI 얘기도 하고 조세재정연구원 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표현된 줄 아세요? 기재부에서 세수 추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셨는지 아세요?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해서 세목별 추계 모형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의 기술적 자문, 해외 사례 검토 등을 통해서 정확도를 제고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있어요. ‘세수 추계 관련 국내 최고 전문기관 중 하나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 그래 놓고 오늘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세수결손 대책 관련해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이것 하나,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보겠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보는 게, 이번에 보도자료 보니까 꼭 외국 사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외국도, 다른 나라들도 세수 추계 오차율이 높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세수 오차율 미국·일본·독일·캐나다·영국·한국의 자료하고 2020년부터 23년도까지 4개 연도 관련해서 미국·일본·독일·캐나다·영국·한국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세수 오차율이 미국이 2015~2019년 사이에 6.9% 그리고 2020부터 2023년까지는 7.8% 이렇게 했고 한국은 5.5였는데 12.4, ‘별로 큰 차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작년 거 한번 보셨습니까? 2023년도, 연도별 평균 세수 오차율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봤습니다.

○**신영대 위원** 미국이 어떻게 됐지요, 세수 오차율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4.4%입니다.

○**신영대 위원** -4.4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신영대 위원** 일본은 어떻게 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3.7입니다.

○**신영대 위원** 독일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0.6입니다.

○**신영대 위원** -0.6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신영대 위원** 한국은 몇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16.4입니다.

○**신영대 위원** -17.7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신영대 위원** 올해 지금 세수 추계 다시 하면 -8.8입니다. 아직 미국·일본·독일 자료는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쳐 가지고 5년 거 평균 내 가지고 ‘해외에서의 추계 오류나 우리나라 추계 오류나 별 차이가 없다. 다른 나라들도 경기 예측을 잘 못하고 경제정책에 대해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특별하게 잘할 수 없는 환경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작년에 한 진단, 작년의 세수 오차에 대한 진단 그리고 세수 오차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대동소이합니다, 2023년도나 2024년도나. 그러면 원인은 뭐냐 보면 경제정책 실패고 경기 전망 실패지요.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 못 써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단지 모형 설계를 잘못하고 모형 설계에 민간의 의견을 듣고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 쭉 읽으신 그 보도자료에 보면, 작년 얘기를 해 보면 저희가 범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을, 너무 매크로 전망만 하니까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시장 컨센서스, 시장 전망을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이 시장 전망이 다 틀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IMF 모형도 저희 모형에다 같

이 넣어 가지고 만들어 봤더니 또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후적으로 예정처나 이런 데 해 가지고 협업을 강화하는 걸로 했는데 올해 개선 방안은 저희가 모형부터, 처음부터 사전적으로 기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걸, 그러니까 변화를 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좀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의 문제는, 아까 경제정책의 실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정책의 실패 때문에, 적어도 세수 오차가 나온 게 정책의 실패だ라고 보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세수 추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저희가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변화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장관님께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본회의를 앞두고 시간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자료도 대안도 없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그야말로 요식행위이자 면피성 보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이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기재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다시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 먼저 결론부터…… 하나 요청을 드리자면 정부가 좀처럼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요, 반복해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의심을 사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IMF 자문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차규근 위원** 그래서 법인세 추계 모형 보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IMF로부터 받은 자문 내용 그걸 국정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리고 장관님, 아까 인사말씀 관련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전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로 기업 영업이익이 예상과 달리 크게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그 전년 2022년도에 발생한 글로벌 복합위기…… 2022년도의 글로벌 복합위기, 아마 러·우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글로벌 복합위기가 2022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당연하게 법인세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과 달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상보다도 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추계 모형을 바꿨는데……

아니,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추계 모형을 바꿔 가지고, 추계 모형을 전년도 기준 연도로 집어넣다 보니까 추계 모형에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규근 위원** 아니, 전년 2022년도에 글로벌 복합위기, 러·우 전쟁도 있었고 공급망 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2023년도에 범인세 수입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거지요. ‘예상과 달리’라는 표현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전망보다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현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장관님,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경우는 세수 오차 절댓값이 2015~2019년에는 6.9고 2020~2023년은 7.8로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교 국가 중에 가장 높거든요. 왜 우리는 미국처럼 이렇게 세수 추계 오차를 별로 차이 안 나게 관리 못 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굳이 미국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개방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충격에 저희가 더 민감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그거 관련해서 아까 또 말씀 중에 우리나라로 높은 대외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것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항상 대외의존도가 높은 거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지만 2022년·23년도 상황은 저희가 수출이 마이너스고 무역수지도 마이너스고 2023년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글로벌 교역 증가율이 가장 낮은 숫자였습니다.

○**차규근 위원** 아까 앞서 민주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저하고라고 할 수 없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GDP의 성장, GDP의 증가율 전망으로 보면 상저하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GDP 증가율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규근 위원** 상저하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GDP 증가율로는 그렇습니다, GDP 증가율로는요.

○**차규근 위원** 그게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저하고였다고 일반적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GDP 증가율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 체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차규근 위원** 장관님, 지금 소매판매액지수가 몇 분기 연속 마이너스인 줄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몇 분기인지 모르지만 계속 마이너스고요 그 대신 서비스 판매는, 서비스 생산은 플러스고 좀 편차가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9분기 연속 마이너스고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12개월 연속 감소세인데요.

과거 보수정부였던 2013년, 2009년에도 모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보다 세수 오차도 크고 민생도 어려운데 고집스럽게 추경은 없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건 그야말로 민생을 포기한 정부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손 든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 세수 오차는 확대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IMF나 OECD에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세수 오차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세수 추계 오차라는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법인세와 특히 재산 과세, 자산 과세에서의 오차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세수결손이 지난해에 이어서 대규모로 발생하다 보니까 세입경정 추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추경은 극히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라든지 대량실업 등과 같은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도 세입경정만을 위한 추경 사례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없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07년도 국가재정법 이후로 세수 부족 일곱 차례가 발생했는데 그때 세입경정 추경 사례는 총 4건이 있었습니다. 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13년도에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고 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추경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간의 세입경정은 대부분, 전부 경제위기로 인해서 지출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요 앞에서 기재부에서 보고를 하실 때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세수 부족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번에 국회의 지적 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자체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교부세·교부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교부세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어떻게 해야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그리고 또 관계부처의 가용재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와야, 그런 것들이 확정되어야지만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결산국회에서 저희한테 지적하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지금 교부세 말씀을 하셔 가지고, 교부세나 교부금의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내국세 등에 연동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 부족에 따라서 교부세나 교부금의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 당국에서도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고 균형 있게 재정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어서 좀 여쭙고 싶은 게요 과거에도 당해 연도에 세수 부족 시에 교부세나 교부금의 집행을 보류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13년, 14년에 있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3년도에 8.5조 원의 국세 수입이 부족해서 2조 원을 배정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14년도 역시 10.9조 원의 국세 수입이 부족해서 1.5조 원을 배정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13년, 14년도 세수 부족 시에도 교부세나 교부금의 집행을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가장 큰 원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또 그 과정에서 국가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느냐, 여기에 연관된 게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을 얼마만큼 덜 지게 하느냐. 결국 추경을 하게 된다는 것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면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세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세출의 효율적인 그런 구조조정을 전제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세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보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걸 대개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은 질의하셨습니까?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장 송언석** 아니, 그런데 질의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언석 하세요.

○김영진 위원 순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고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수 추계 관련해서, 2년 연속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또 책임을 세제실에 물리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경제 전반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펀더멘털과 경제정책 그리고 그에 따르는 통화·재정·조세 정책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 징조를 수치로서 보여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24년 추계와 2025년 추계도 사실 건전재정과 긴축기조하에서 설계하고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되게 짜게 설계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보시기에? 넓게 확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건전재정을 기조로, 긴축의 기조하에 세입세출을 추계한 것 아니에요, 큰 방향이? 그러면서 건전재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올바른 방향이다, 그런 추세로 지금 결정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께서 재정을 짜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김영진 위원 아니, 부정적은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재정 당국으로서 저희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민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니, 그것은 뭐, 주장하시는 건 괜찮고.

결론은 긴축재정과 건전재정의 기조하에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설계했는데도 지금 사실은 30조가, 세수 추계에 오류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것은 저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작년에……

○김영진 위원 질의를 들어 보세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방적 추계 모형이나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 근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분석하는 게 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3년, 24년 두 해에 걸쳐서 이 정도의 오차가 나오는 상황들은 대단한 위험 신호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니까, 장관은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면 과연 그동안에 정부가 정권 교체 이후 3년 동안 진행해 왔었던 총괄적인 경제 정책 그다음에 조세정책, 재정·통화 정책이 제대로 경제현장에 녹아 들어가서 경제 활성화와 이런 조세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했는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되돌아보고, 중장기적인 분석도 하고 되돌아봐야 한다는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24년 재추계 결과는 22년, 23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그게 말씀하신 위험 상황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다만 올해

들어서는 저희 노력한 결과도 있고 대내외 여건이 변화한 것도 있어서, 국민이 같이 노력해서 올해부터는 적어도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세수에 대한 저희 전망 자체는 올해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더 철저히 짚어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데 결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현찰로 나온……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은 24년 재추계니까 작년의 결과래도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현찰로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작년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현찰로 나온 상황이라서,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께서 자꾸만 수치를 부인 하시면 안 돼요. 그 수치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지요.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아주 뜨듯한 물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익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체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잘못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서, 결론은 긴축과 건전재정 기조로 이어 가서 재정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체 경제가 수축이 되고 침체하고 그에 따르니까 또다시 세수의 오류와 세입의 기반이 붕괴되고 또다시 경기가 침체되고 또다시 세수의 오류가 생기는 이런 문제의 연속성에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상태로 30조가, 세수 잘못돼서 하면, 결론은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56조의 그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SOC라든지 제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을 불용 처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결론은 내년에도 또다시 경제 기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까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돼서 올해는 저희가 최대한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자체의 경제 상황에 주름이 안 가도록 그다음에 저희가 국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사업과 관련돼서 민생에 주름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하더라도 어느 수치 이내로 보고하라 하면 그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이지 않아요. 작년 불용된 만큼 또다시 불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결론은 그런 반복이기 때문에 현 판단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안도결 위원님 그리고 진성준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그다음에 박수민 위원님 손 드셨지요?

○박수민 위원 예.

○위원장 송언석 일단 안도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제가 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언석 예, 천하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천하람 위원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내년도 예산안 책정하시면서 국세 수입을 382.4조 원으로 잡아 놓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천하람 위원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가 337.7조 원인데 1년 사이에 44.7조 원의 세수 증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가 올해 세수 재추계를 하면서 그 부분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법인세나 기업들의, 상장사 영업이익 자체가 벌써 23년도 상반기랑 24년도 상반기를 보면 44조가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해 가지고요, 재추계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했고 저희의 내년도 세수 예측은 KDI하고 조세재정연구원도 거의 비슷한 레인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한 결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천하람 위원 사실 지난번 7월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저도 뭐 ‘서민 중세’ 이렇게 너무 프레임을 짜는 위딩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담뱃값, 부가가치세 그런 것 인상 계획 없다라고 하시면서 서민이나 중산층에 부담이 가는 중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우리가 대화를 나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내년도 세수 증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봤던 게, 지금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과세 추진하고 계시지요?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아마 현대차나 기아, 삼성전자나 여러 회사들이 해당 종업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근로소득 과세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직장인이나 중산층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늘리는 중세 아닙니까? 서민이나 중산층 부담 늘리는 과세 안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역행하는 부분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세제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비과세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민에 대한 중세는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기존에는 전액 비과세였던 것에 대해서 비과세 범위를 정한다고 하는 거지만 반대로 비과세 범위를 정하면 남는 부분은 과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말만 비과세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는 거지 사실상 새롭게 중산층 직장인들에 대해서 중세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비과세라고 얘기를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이것은 차라리 중세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중세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고 국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그냥 뭉개고 가시면서 ‘이것 비과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저희가 뭉갤 수는 없지요. 어차피 조세소위에서 위원님들과 저희가 논의를 해 가지고 여기서 승인을 해 주셔야지만 이 법 개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국민들 보고 계신 자리기 때문에 좀 명확한 얘기를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니까요 조각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과세를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각투자라는 게 미술품을 여러 사람이 크라우드 펀딩 해서 조각조각 해서 사거나 음원이나 이런 부분인데 부총리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초고가에 해당하는 미술품 원본에 대해서도 우리 사실상 비과세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 또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작은 시드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조각상품 이런 것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초고가 미술품 갖고 있는 슈퍼 리치나 아니면 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조각상품 투자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나 서민·중산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 이것 그때 말씀하셨던 서민 중세 안 하겠다라고 했던 것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하여튼 지금 저희가 세법 개정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에 나오는 모든 조항을 ‘이것은 서민 중세냐 서민 감세냐’라는 그런 딱, 너무 단순한 기준으로 보시기에는 그렇지요.

○**천하람 위원** 저도 이분법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천하람 위원**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는 좀 따져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러니까 그런 과세형평과 그다음에 실제로 다른 정책 목적을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그런데 오늘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표현도 바꾸고 설명드릴 때 그렇게 명확히 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광주 동·남을 안도걸입니다.

지금 세수실적이 22년에 비춰 가지고 금년까지 해 가지고 절대액이 58조가 준 것 아니

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의 명목성장률이 3.3%, 올해 5.5% 정도 예상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세수가 준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민들이 이런 국가 재정상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결손이 30조가 또 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재부의 대책은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서 오차를 줄이겠다, 그런 노력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의 변동성, 그에 따른 세수의 변동성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어떠한 제도개선이랄까 이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첫 번째가 세수 추계를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면서 9월 달에 세수를 추계해 가지고 국회에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11월 달에 국회에서 심사를 할 때 이때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9월 달하고 11월 달하고 경기전망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세수에 좀 손을 댔더라면 아마 이 오차는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1월 달에 반드시 재추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차피 30조는 발생됐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총리께서 가급적이면 경제 또 지방의 주름살을 최소화하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기금이라든가 이런 쪽의 여유재원을 동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쪽에 별 여력이 없을 듯 싶어요. 외평기금, 작년·금년 40조 갖다 썼지요. 그렇지만 지금 원화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화자산도 비축을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외평기금 빼고는, 지금 우리 기금이 63개 있지만 여력이 다 바닥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30조라는 큰돈을 가져올 수 있을지 난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세출 구조조정이지요. 그러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 30조 정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방교부금인데 당년도에 정산을 다 해 버리면 예를 들어 12조 정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지방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중앙부처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11개 부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R&D를 줄일 건지 SOC를 줄일 건지 산업을 줄일 건지 중소기업을 줄일 건지 복지를 줄일 건지,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줄일 건지 이게 지금 굉장히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경제적인 충격도 클 것이고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클 거란 말입니다.

과연 이것을 지금 기재부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느냐? 물론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하시겠다 했지만 이는 부문 간에 굉장히 이해상충도 있고 또 부문 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내역을 결국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추경을 하게 된다면 곧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건데 그 말은 맞지는 않고요. 국채 발행 없이도 기금 간의 여유재원을 동원하고 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내용을 행정부 혼자 독단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인 겁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제도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입결손이 대규모로 발생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때는 세입경정을 하고 또 그 정도의 세입 부족이 생기면 세출 조정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세출 삭감 내용까지 포함한 추경을 국회에서 가져와서 하고 그렇게 동의를 얻는 것이 국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총리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 예산안이 오면 국회에서 3개월 동안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상 한 5, 6조 깎고 늘리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예산을 조정하는데 국회가 3개월을 에너지를 투입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결손이 생기면 반드시 국회에 와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1월에 내년도 예산안에 넣은 세수 추계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클 경우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추계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세수 재추계에 대한 대응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국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입니다.

부총리께서 인사하시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최대한 이번의 이 대응에 대해서, 우리 지방 경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생에 구김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 추계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쇄신을 통해서 하여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게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책임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일단은 그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부총리의 그간의 답변을 죽 들어 보면 이것이 단순한 세수 추계상의 문제다, 시나리오나 또는 추계 모형이나 이런 것들이 정밀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이다

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년 연속으로 한두 품도 아니고 수십조 씩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라고 표현하시고 대내외 경제여건이라고 표현하시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대응하지 못해 왔다라고 하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도 새겨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정말 기획재정부가 세수 추계상 모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재정청문회를 열어서 그야말로 시나리오상의 문제였는지 단순한 추계상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정부의 이런 대내외적 경제여건에 대응하는 경제정책에 또는 재정·통화 정책 등에 근본적인 한계와 오류가 있었는지를 따져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정청문회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당국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이번 세수 추계는 작년까지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를 지금 방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의 어떤 결과와 그다음에 대외여건의 변화로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속도의 차이고 민생이 체감하는 문제는 있지만 세수 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진성준 위원** 그렇게 장담하시니 내년도 세수상황도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지켜봐 주시지요.

○**진성준 위원** 자꾸 그렇게 강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외 글로벌 경제위기 문제, 복합위기 문제는 이미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문제고 그에 따른 대응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기업에 맡겨 놓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업이 스스로만 다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기획재정부는 뭐 하러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청문회,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아까 답변 과정에서 이런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으로 이번에도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의 불용 문제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하든 그 부분의 조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성준 위원** 그런데 연동되어 있는데 다다음 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당장 올해 불용을 결정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또는 교육청이 입는 타격이 너무 크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와 교육청과 지금 소통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는 그런 주제를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세수결손에 따라서, 물론 연동돼 있긴 하지만 당해 연도에 불용을 함으로써 막바로 타격을 주는 문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제도적으로도 그 문제를 당장에 대응할 게 아니라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만약에 어떤 경우는, 어떤 지자체는 내년, 후년에 갑자기 절벽을 주는 게 나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지자체별로 소통을 해 가지고, 지자체의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이렇게 세수결손이 대규모로 발생이 예상되면 추경 해서 세입도 조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국가재정법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점을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일단은 입법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세수결손만을 위한 추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또 질문하지요.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관계만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 제출하실 때요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91.6조 원으로 두셨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그리고 국가 채무는 69조, 한 70조 정도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 차이를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때? 여유기금을 활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

○**김영환 위원** 맞습니다. 돌려 보시면, 지금 영상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유기금이 도대체 무슨, 외평기금처럼 그때 썼던 것들이 자꾸 연상이 돼요. 그리고 법정전출금 등 안 준 것들도 또 연상이 돼요.

그런데 지금 30조, 제가 예결위 때 ‘한 32조 정도 평크 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추계 결과 한 30조 나왔어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겠다. 아니, 기금이 무슨 금도끼 나오는 연못도 아니고 계속 평크 나면 기금, 평크 나면 기금…… 외평기금도 한 43조 예산계획 세울 때 조기 상환으로 지금 잡아 놓으셨잖아요. 분명히 이런데 20% 자체 계획 또 변경하실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외평기금과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20% 그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 43조도 사실은 조기 상환 잡혀 있어요, 올해 예산안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지금 환율 변동기잖아요. 미국 금리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사실은 채권 같은 경우는 스마일이라고 그래요. 올라갔을 때도 수요가 있고 내려갔을 때도 수요가 있고, 미국채 같은 경우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83조 줬지요? 83조 예산 계획 세우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여기는 변경하실 생각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 세수 재추계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셔서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국회에 전혀 설명이 없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재추계 상태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저희가 전혀 모르는데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기재부가 건전재정 운용하겠다 이제까지 해 놓고 작년에 56조 세수 평크 내놓고 올해도 30조 세수 평크 내놓고, 건전재정의 ‘건전’ 자를 이제 빼야 돼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은 이제 건전재정이 아닙니다. 이게 56조 세수 평크 나고 30조 세수 평크 나는데 어떻게 건전하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일단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세수 재추계 결과만 보면 경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요. 관세 1.9조 예산안 대비 감소, 경제 상황 보여 주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김영환 위원** 수입액이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개별소비세, 차규근 위원님께서 9분기 연속 소매판매액이 줄어들었다고 얘기 하셨어요. 개별소비세 줄어들었어요, 1.2조.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어요, 범인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아니, 기재부하고 국토부 여러…… 부동산시장 안 좋다고 해서 금융지원 대책 발표했지요, 각종 규제 다 합리화한다고 규제 해제했지요. 그런데도 양도세가

6조 정도 줄어들었어요.

더더군다나 종합소득세 4조,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 있잖아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줄어들었어요? 종합소득세에서 어디서 많이 줄어들었냐고요. 저는 사업소득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워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김영환 위원** 이쪽에서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미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의 경제정책이 이제까지 제대로 대책이 되었느냐. 이 재추계 결과만 봐도 알아요,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런데 경제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꾸 주장을 하세요.

그리고 자료제출 좀 할게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할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다음에 한 9조 정도가 교부금하고 교부세 덜 지급하게 될 것 같아요. 목표치를 얼마나 가지고 지금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있는지 그것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법정전출금들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할지 이것도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전출되도록 해 놓았던 예산 계획이 혹시 변동이 있는 건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조세지출 예산서 있잖아요, 23년도·24년도 예산안에 넣었던 것. 24년도 현재까지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적어 놨던 조세지출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변동이 있는 건지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부세, 교부금은 물론 목표치가 맥시멈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금 지자체랑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민 위원** 부총리님, 세수 추계 모델의 투명성에 대해서 한 단계 진전된, 예산정책처와의 협의를 좀 더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것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세수 추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더 정확성을 높여야 되는데 동시에 세수 추계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선진국의 방식입니다. 즉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 규모는 커지지만 잠재성장률은 낮아집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상당히 일정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잠재성장률 기준으로 저희가 지출 총액 증가율을 설정하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인 준칙형 지출이 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증가율이 된 상태에서 세수가 넘어서,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국채를 갚고 세수가 부족해서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되면 자동으로 발행하고, 일종의 자동안정화장치 같은 방식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준칙주의인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것도 하나의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민 위원** 맞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렇게 돼야 민간 경제에 대한 충격을 저희가, 카운터사이클(countercycle)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사이클이 좋을 때는 재정을 줄여 주고 경기가 안 좋은, 사이클이 안 좋을 때는 재정을 더 써 주는 자동안정화장치가 되는데 이것을 해 주려면 국채가 국채 한도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예산총칙이 국채 한도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빠빠하게 운영해서, 보니까 세입세출을 맞춰야 된다는, 본 위원 표현으로는 단년도주의입니다, 이것에 아직 저희가 기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그렇지만 또 그 부분에 아마 행정부의 어떤 책임 있는 집행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관행인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그런데 이런 자동안정화장치, 준칙주의 방식이 아닌 단년도 세입세출을 무조건 맞춘다는 이 방식이 오히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과잉으로 요청하면서 의존도를 키우면서 논란이 커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수 추계가 역대 정부에서 틀려 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박수민 위원** 한때 초과세수가 60조 원인가 넘게 들어온 적도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수민 위원** 그런데 그해에 국채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아니, 초과세수가 60조가 더 들어온 해에 왜 국채를 찍었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은 공개적으로, 그냥 저도 답답해서 한번 던져 보는 겁니다.

저희가 선진국이 이미 됐고 민간 중심의 경제가 됐다면 준칙주의에 의해서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국채를 갚아야 하고, 현 정부에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건전 재정 기조로 하겠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채가 너무 늘어 왔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있는데도 국채를 찍었을 정도로 국채가 늘어 왔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인이 형성되면 지출을 쉽게 못 줄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박수민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출을 줄이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건전 재정 말로는 하지만 못 하고 있고 통화를 자극하지 않는 중립재정 수준 정도만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국채는 많이 찍고 있지요.

그리고 이 국채 찍어야 되느냐 마느냐, 세수 이걸 맞춰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토론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칙주의 속에서 저희가 자동안정화장치를 하면서 지출의 품질을 높이는 토론, 그리고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토론한다고 해서 세수가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수는 반드시 산업의 진화, 산업 혁신의 품질이 좋아져야 되고 저희 재정지출의 품질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2007년에 세제실에 1년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2007년 기재위에서 저 답변석에 앉아 있을 때와 저희 토론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수 추계의 정합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저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수 추계의 의존도를 낮추는 선진국형 재정 총량 관리 그리고 이런 것을 가장 처음 논의해 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부채 비율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봐 줄 수 있는 가장 적임의 거시 경제 전문의 경제부총리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답을 요청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큰 태세 전환, 기조의 전환을 반드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결국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그다음에 또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신축적인 재정 운용과의 사이인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또 행정부가 여러 가지 신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면서 다만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책임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뢰를 얻어 나가는 과정을 축적하면서 말씀하신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로 정태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 정태호입니다.

저는 이번 세수결손 추계 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재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기재부 개혁론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부총리님, 들어 보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들어 봤습니다.

○**정태호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세수 추계 모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경제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 예측 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모형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나라 살림이 거덜 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총국세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22년에 395조였고 23년에 344조

였고 24년에는 337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총국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곳간이 비어 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심각함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거지요.

그러면서 건전재정 얘기만 하고 있거든. 이것은 지금 건전재정 문제가 아니라 곳간이 비어 나라 살림이 거덜 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전재정만 떠들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요. 전혀 현실에 대한, 기재부의 인식 자체가 저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예산안에도, 내년도 예산 382조를 예산안으로 제출해 놨는데 23년, 24년을 비교해 보면…… 24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23년 실적보다 23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7조예요. 30조 원이 빚나간 거예요, 예측이. 그런데 지금 내년도 25년 예산은 45조 이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올해 예산안 세울 때 23조가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30조가 빚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반복되니까 기재부가 완전 늑대소년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매일 거짓말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요. 그 불신이 지금 있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미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이 현실을 기재부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선 정부가 사과부터 제대로 해라, 그래야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지요.

아까 부총리께서 송구하고 책임이 무겁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사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예.

○**정태호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기재위 차원의 공청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를 하셨잖아요.

부총리님, 여야 간에 합의를 하면 수용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여야가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저는 여야 합의하면 재정 전반에 관한 공청회를 기재위에서 하는 것에 동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위원장 송언석** 예, 간사 간에 협의를 좀 더 하도록……

○**정태호 위원** 그러면 사과를 하셨고 또 우리가 합의하면 동의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여야 간에 합의해서 재정 전반에 관한 공청회를 기재위가 개최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언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위원장 송언석**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아까 김영환 위원 자료 요청하신 게 있는데 지금 세수결손이 30조 발생했고 30조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대응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기재부가 30조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기금 돌려막기로 할지 또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안 줄지 이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를 국감 전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감 전에 받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국정감사 때 이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오늘 토론 내용이 아마 대부분 다 국정감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가 더 협의해서 자료를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받고 내부 공유하는 절차를 위원장님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언석** 대단히 중요한 제안입니다.

다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수 추계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으셨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사과를, 정태호 간사님께서 받으셨지요.

그리고 오늘 제가 느끼기에 조금 진일보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세수 추계 과정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국회예정처라든지 KDI나 조세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기관을 포함시켜서 공개적으로 세수 전망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진일보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좀 더 제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 자리, 기재위에 계신 여야 위원님들을 떠나서 국민들께서도 상당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영환 위원님이 자료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을 오기형 위원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고 또 정태호 간사님이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국세가 전보다 증가…… 과거에는 항상 국세가 증가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모든 경제 전망이나 예산이나 이렇게 편성을 해 왔는데 지금은 국세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하는 부분이 사실 큰 흐름에서는 우리가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업활동이 상대적으로 전보다 활발하지 못하다, 좀 위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왜 기업 경영활동이, 기업활동이 그렇게 위축되고 있느냐 그 원인에 대한 것은 조금 짚어 봐야 됩니다. 경제정책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이 과연 택스라든지 금융이나 예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그런 경제정책이 아닌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인지.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정부에서는 폭넓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정책을 취하시면 좀 더 정합성 있는 그런 전망도 가능할 거고 또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회의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발언 순서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경제재정(11인)	김영진 윤호중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황명선	더불어민주당(6)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이종욱	국민의 힘(4)
	차규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조세(13인)	김영환 신영대 안도결 오기형 임광현 정태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7)
	구자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최은석	국민의 힘(5)
	천하람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기금심사(5인)	김태년 박홍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3)
	이인선 이종욱	국민의 힘(2)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청원심사(5인)	임광현 정성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3)
	◎구자근 최은석	국민의 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4인)

성명	직책	신문요지	신청위원	일자 및 대상기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회피 및 소송 관련	안도결 오기형 정일영 최기상	10. 16.(수) 국세청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세무플랫폼(삼쩜삼) 문제점 관련	황명선	
김범섭	서비스앤빌런즈 대표	국세청 대응 질의 및 의견 청취		
고서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사후관리 관련	박수영	

참고인(1인)

성명	직책	신문요지	신청위원	일자 및 대상기관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가업상속공제 관련	차규근	10. 11.(금) 기획재정부

○출석 위원(26인)

구자근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홍근 송언석
 신영대 안도결 오기형 윤호중 이인선 이종욱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정태호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황명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전문위원 이정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최상목
 제2차관 김윤상
 차관보 윤인대
 재정관리관 안상열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예산실장 김동일
세제실장 정정훈
경제정책국장 김재훈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공공정책국장 박준호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정덕영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관세정책관 최재영
재정성과심의관 김명중
조세개혁추진단장 김건영

【보고사항】

○ 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탄소세법안

(2024. 9. 10.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9)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2024. 9. 10.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6)

이상 7건 9월 11일 회부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김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7)

9월 12일 회부됨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 9. 12.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4. 9. 12.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3)

이상 5건 9월 13일 회부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이상 4건 9월 19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9.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9. 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9.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9.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이상 4건 9월 20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이상 4건 9월 23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7)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3.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2)

이상 3건 9월 24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4.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6)

이상 4건 9월 25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900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